

주간 통일정세

2015-01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 북한, 김정은 신년사 지지하며 '통일과 대화' 총공세(1/1, 평양방송; 1/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일 남북관계에 대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 발언을 지지하는 대남 관계자들의 기고문을 잇달아 게재함.
 - 먼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의 김영일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투쟁해 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며 "북남 관계를 개선하고 민족 화해와 단합을 이룩해나가기 위한 사업에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했다고 매체는 전함.
 - 이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의 리혁광은 "서로에 대한 옳은 관점과 이해를 갖고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나갈 때만이 관계 개선의 전환적 국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 매체는 전함.
 - 또 조국전선 서기국의 김철민도 "신년사에 북남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과업과 방도가 환히 밝혀져 있다"며 "통일을 앞당기는 역사적 전환의 길에 들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 평양방송도 1일 밤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에 "조국통일의 총적 방향과 투쟁 방도가 명백히 밝혀져 있다"면서 무엇보다 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어 방송은 "상대방을 반대하는 전쟁 연습이 벌어지는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신의 있는 대화가 이뤄질 수 없고 북남관계도 전진할 수 없다"며 한미 합동군사 훈련 중단을 거듭 요구함.
 - 또 방송은 흡수통일을 위한 체제 대결을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는 반역행위"로 규정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야 한다"고 역설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남한 국방백서 주적 표현은 '통일대박' 부정"(12/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북남관계 파국을 부채질하는 고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국방백서의 주적 표현은 "신뢰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들이 체제대결 각본이며 북침전쟁 선언임을 공공연히 선포하는 것"이라고 지적함.
 - 신문은 남측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주적 표현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장본인은 남측이라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대북전단 살포, 북한 인권문제 압박 등을 그 사례로 꼽음.
 - 특히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유지하는 것은 남측이 "새해에도 반공화국 적대의를 고취하며 군사적 도발에 계속 광분할 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며 "우리와 끝까지 힘으로 대결하려는 흉악한 기도"라고 비난함.
- 북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강력 반발... "군사적 도발"(12/3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30일 개인 필명의 글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하 정보공유 약정)은 "기만적인 북 위협설에 기초해 우리 공화국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고 침략하기 위한 엄중한 반공화국 군사적 도발"이며 "사태의 장본인은 미국"이라고 주장하며 강력 반발함.
 - 매체는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미국·남조선·일본 사이의 3각 군사동맹 구축이 본격화되게 됐으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핵전쟁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짙게 드리우게 됐다"고 지적함.
 - 이어 매체는 남한 정부가 "백년숙적들과의 군사적 결탁"에 나섰다며 "민족의 안녕과 존엄은 안중에도 없는 희세의 반역아들"이라고 비난함.
- 북한, 대화 제의에 반응 없이 통준위 비난 공세(12/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6면에 '체제통일의 개꿈에 사로잡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체제대결을 본격화할 기도 밑에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라는 것을 만들어냈다"며 통준위에 대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며, 정부의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정부가 대화 채널로 내세운 통준위를 강하게 비난함.

- 신문은 통준위가 준비 중인 통일현장에 대해서도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위험한 전쟁문서"로 규정하고 "괴뢰반역패당의 반통일 범죄행위를 역사와 민족은 철저히 결산할 것"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또 '악랄하게 감행된 반공화국 심리모략전'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정부가 반복 '대결 망동'을 벌였다며 "우리 공화국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악의에 차서 비방중상하는 도발적인 뼈라 살포를 비롯한 심리모략 소동은 그 대표적 실례"라고 주장함.
 - 이어 신문은 '대결 흥심을 드러낸 북인권법 조작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치마두른 독재광"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매도함.
- 북한, 대화 제의에 답 없이 '대북정책 전환' 요구(12/31, 노동신문; 평양방송)
- 노동신문은 31일 논평에서 "북남관계를 파국 상태로 몰아넣은 장본인은 다름아닌 남조선 괴뢰패당"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대화 제의의 전면에서 나선 통일준비위원회를 거듭 비난했으며, 이 밖에도 북한의 핵·경제 병진노선에 대한 비판, 대북전단 살포, 한미 합동군사연습, 대북 인권 공세 등을 '반공화국 대결책동'의 사례로 들며 비난함.
 - 이어 신문은 31일 6면 전체에 세월호 참사, '정윤희 국정개입 의혹' 사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등 올해 주요 국내 사건들도 한꺼번에 거론하며 대남 비난 공세의 강도를 높임.
 - 또 '반역의 한해에 대한 민심의 고조'라는 제목의 글에서 세월호 참사를 "반인민적 악정이 빚어낸 필연적 산물"로 규정했으며 다른 글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까지 언급하며 박 대통령을 비난함.
 - 평양방송도 31일 "괴뢰패당이 근본적인 대북정책 전환에 나서지 않는 한 새해에도 북남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으며, 특히 올해 남북관계 악화의 주원인으로 남측의 '비방중상과 악담'을 꼽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비판 발언을 열거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조선신보 "남측이 결단해야 남북 교착상태 해결"(1/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일 '2015년 신년사, 대축전장을 향한 총진군의 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고지도자의 육성으로 남북관계 대전환의 지름길이 제시된 천금과 같은 기회를 놓침이 없이 남측이 결단을 내려야 교착상태가 타개될 수 있다"고 밝힘.
 - 매체는 올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가 남북관계와 통일 문제를 중요하게 다뤘다고 분석하고 최고지도자가 신년사에서 '최고위급 회담'을 언급한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고 의미를 부여함.
 - 다만 남북관계 개선에서 미국의 태도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며 미국에 정책 전환을 촉구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는 '당당한 요구'이며 '최후통첩'이라고 강조함.
 - 이어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며 창조적 경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부각한 것은 과학·인재중시를 강조한 2013년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100주년 기념 연설의 기조와 같은 것이라고 평가함.
 - 특히 경제개혁에 당의 지원을 보장한 것은 "최근 경제관리방법의 개선과정에서 이룩한 성과에 기초해 강성부흥전략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을 예고한 것"이라고 매체는 해석함.

라. 대남 군사 관계

- 조선신보 "국방력 강해야 남북 교류협력도 가능"(12/3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1일 평양발 기사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30일(보도 날짜) 참관한 여군 방사포 부대 포사격 훈련에 대해 "인민들은 이를 자위적 전쟁억제력의 과시로 간주한다"고 설명하며, 훈련장에서 "당장이라도 전쟁의 총 포성이 울릴 수 있다는 자각"을 언급하며 "싸움준비 완성"을 독려했다고 전함.
 - 이어 "조선의 자위적 힘이 강해야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평화롭고 화목한 분위기가 삼천리 강산에 마련될 수 있으며 예컨대 북남 사이의 민족적인 협력과 교류도 보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며 북한의 국방력이 강해야 남북 교류협력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매체는 강조함.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특이사항 없음

- '민족분열을 하루빨리 끝내고 조국을 통일하는 것은 우리 겨레 앞에 나선 신성한 의무이며 민족사의 엄숙한 부름'이라며 '조국해방 70돌이 되는 올해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섬으로써 통일을 이룩하고 통일강국을 일떠세워야 한다'고 강조(1.3,평양방송)
- 충청북도 진천에서 구제역 발생(12.3) 이후 주변지역(道內 15곳) 빠르게 확대 및 충청남도 천안 등(경기 이천·경북 영천) 급속히 전파 (1.4,중앙통신· 중앙방송)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러시아 크림 병합은 전적으로 합법"(12/30, 타스 통신)
 - 평양에 지국을 둔 러시아 타스 통신은 30일 정동학 북한 외무성 공보국장이 타스 통신 특파원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전적으로 합법적인 조치로 간주한다고 밝혔다고 30일 보도함.
 - 통신은 정 국장이 "러시아 국민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영도 아래 외부의 압력과 제재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낼 것"이라며 "우리는 자국의 이익을 단호히 수호하려는 러시아의 입장이 공정하다고 간주한다"고 강조했다며, 이와 함께 북-러 간 전통적 우호 협력 관계 발전은 북한의 변함없는 정책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북한 조선중앙통신을 인용하면서 러시아와 북한이 내년에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미국 대북제재 비난...“구태의연한 적대감”(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기자와의 문답에서 이번 제재는 "수사 결과에 대한 국제적 의심이 커지자 자기 체면을 부지하고 우리의 국제적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대변인은 이어 "미국의 대북제재는 우리에게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대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구태의연한 조치"라며 북한을 약화하기는 커녕 오히려 '선군의 보검'을 더욱 날카롭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함.
 - 그는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억지 주장에 대해 이미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 밝혔고 미국과 서방의 주요 언론들과 한자하는 전문가들 속에서도 이번 해킹 사건은 북조선의 소행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고 주장함.
 - 대변인은 북한의 소니 해킹설을 거듭 부인하며 "미국이 사이버 공격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뒤가 썩은 그들의 속내를 날달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라고 비난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특이사항 없음

다. 회담 관련

- 北, 병진노선·핵억제력 강조...6자회담 재개 불투명(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남북관계에는 일단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지만, 김정은 당 제1비서가 국방 분야와 관련, 소위 '병진 노선'을 관철할 것이며, 또 한반도에서의 긴장 격화 원인을 미국의 적대 정책으로 지목하면서 '핵억제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핵 문제에 대한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전하며, 새해에도 북핵 6자 회담 재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보도함.

라. 대미국

- 북한, 미국에 '소니 해킹' 공동조사 촉구(12/30,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30일 '미국은 소니 픽처스 사태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은 더 큰 봉변을 당하기 전에 우리의 공동조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함.
 - 논평은 미국이 북한 체제를 흔들 목적으로 뚜렷한 근거 없이 '소니 해킹' 배후로 북한을 지목한데 이어 테러지원국 재지정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미국의 오만무례한 처사는 먹잇감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승냥이의 기질 그대로다"라고 비난함.

- 조선신보 "'쿠바 데탕트'는 미국 봉쇄정책 실패 의미"(12/31,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1일 '조선과 쿠바는 사회주의 수호의 전우'라는 제목의 글에서 1959년 이후 계속된 미국의 대쿠바 경제봉쇄조치를 언급하며 "두 나라(미국과 쿠바)의 국교정상화 합의는 미국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의 파탄을 의미한다"라고 밝힘.
 - 매체는 미국-쿠바 국교정상화는 북한 내에서도 화젯거리라며 "미국이 제재와 압력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간섭을 일삼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이 향간의 평가"라고 분석함.

마. 대중국

- 북한-중국, 체육교류의정서 체결(12/30, 연합뉴스·신화통신)
 - 연합뉴스는 주북한 중국대사관이 30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인용하여 북한과 중국이 새해에 체육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은 '2015 체육교류의정서'를 29일 평양 인민문화궁에서 체결했으며, 이에 손광호 북한 체육성 부상과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참석했다고 30일 보도함.

- 북한 '중국 시진핑 연하장' 짧게 보도(1/1,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1일 "새해에 즈음해 여러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각계 인사들이 연하장을 보내왔다"며 러시아 대통령, 중국 국가 주석,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순으로 각 국가수반의 이름 언급 없이 직책만 밝혔으며, 예년과 달리 중국을 러시아보다 후순위로 호명함.
 - 이어 통신은 유엔 사무총장, 베트남 주석, 우간다 대통령 등 15여개국 국가수반도 김정은 黨 제1비서에게 연하장을 보냈다고 전했다. 연하장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연합뉴스는 과거 북한이 외국 국가수반이 김정일·김정은에게 연하장을 보냈다는 소식을 전할 때 중국·쿠바·러시아 순으로 국가 수반을 각각 호명했으며, 2009년 이후에는 매년 중국 최고지도부가 김정일·김정은에게 연하장을 보낼 때마다 중국을 다른 국가와 구분해 별도의 기사로 다루며 양국 간 친선을 부각한 것과 달리, 올해 북한의 연하장 보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호명 순서가 바뀌었다고 1일 보도함.

바. 대일본

- 북한 "위안부 보도 언론 협박은 일본 군국주의 광증"(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언론 협박의 진의도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사히(朝日)신문 협박사건은 대동아 공영권의 옛 꿈을 실현해보려는 군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광증의 발로"라고 밝힘.
 - 신문은 일본의 군국주의가 객관성과 진실성을 보장해야 할 언론에까지 몰아치고 있다며 "일본 반동들이 과거 범죄 역사를 부정할수록 과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함.

사. 대러시아

- 특이사항 없음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북한 김정은, 라울 카스트로에 쿠바혁명 기념 축전(12/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쿠바혁명 56주년을 기념하는 축전을 보냈으며, 축전에서 "지난 반세기 이상 영웅적 쿠바 인민은 피델 카스트로 동지와 당신의 영도 밑에 미제와 적대세력의 제재 봉쇄와 침략 위협에 맞서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있다"며 '지지'와 '연대성'을 보낸다고 밝혔다고 전함.
- 북한, 인도네시아에 '에어아시아' 사고 위로전문(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에어아시아기 실종 사고를 위로하는 전문을 보냈으며, 전문에서 "귀국에서 뜻하지 않은 여객기 실종사고가 발생했다는 불행한 소식에 접해 당신과 당신을 통해 귀국 정부와 인민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깊은 동정과 위문을 표시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함.

- "미국은 원천적인 테러국가, 국제테러 왕초"라며 미국 국가의 태동과정 및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반테러전 주민살상과 최근 CIA 고문자행 등 거론하며 "미국을 지구상에서 송두리째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12.29, 중앙통신)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에 따른 미국 정부의 對러 제재강화 발표를 전하며 이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사태조작, 러시아에서 정권교체 목적"이라며 '러시아의 對美 강력대응 입장' 지지(12.29, 중앙방송)
- 올해 '한반도에서 긴장정세가 조성된 것은 미국의 反北 정책에 따른 무력증강·북침 전쟁연습과 관련이 있다'며 미국의 '남한과 한반도 주변 무력증강' 폭로(12.29, 평양방송)
- '北美사이의 정전상태, 교전관계를 해소하는가 못하는가는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침략책동에 매달리지 말고 정책전환을 해야 한다'고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촉구(1.3, 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아사히신문의 '일본군 성노예범죄 실상' 보도에 대한 신문사 협박사건에 대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군국주의자들의 무분별한 광증의 발로"라고 개탄(1.4, 중앙방송·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여군 포사격 훈련 참관...김여정 동행(12/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관하 여성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함.
 - 통신은 훈련을 지켜본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여성 방사포병들이 포를 정말 잘 쏜다"고 치하하고 "임의의 시각에 불의의 정황을 주면서 예상 못 할 형식과 방법으로 부대들의 훈련을 강도 높게 조직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함.
 - 이어 통신은 군사훈련 참관에 김여정 부부장 외에도 최룡해 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김영철 경찰총국장, 오금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김명식 해군사령관, 최영호 공군사령관, 김영복, 오일정·한광상 당 부장, 리병철이 동행했으며, 박정천 화력지휘국장이 훈련장에서 이들을 맞이했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신년사 육성 발표(1/1, 조선중앙TV)
 - 북한 김정은 黨 제1비서는 1일 집무실인 노동당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육성으로 발표했으며, 조선중앙TV는 1일 오전 9시 36분부터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신년사 발표를 중계함.
 - 김정은 黨 제1비서는 "북과 남이 더 이상 무의미한 언쟁과 별치 않은 문제로 시간과 정력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야 한다"면서 '통 큰' 대화 의지를 역설했.
 - 이어 "북남 사이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변혁을 가져와야 한다"며 "대화과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함.
 - 그는 또 당 창건 70주년, 광복 70주년이 되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로 빛내야 한다며 "당 사업의 주된 힘이 인민생활 향상에 돌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먹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이를 주도할 '3대 축'으로 농산·축산·수산업을 제시하고 각 분야의 생산 정상화를 독려함.
 - 경제 분야에서는 "내각을 비롯한 국가 경제 지도기관들에서 현실적 요구에 맞는 우리식 경제관리 방법을 확립"해야하며, "모든 경쟁에 의한 기업체들이 경제·기업 전략을 바로 세우고 기업 활동을 주동적·창발적"으로 해나갈 것을 언급함.
 - 또 정치 및 군사 분야와 관련해 "혁명의 사상진지를 철통같이 다져 나가야 한다"며 사상교육을 담당하는 당 간부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군인들에게 "수령보위의 칼을 날카롭게 베풀며 실전과 같은 전투정치훈련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김정은, 군부와 금수산궁전 참배...새해 첫 활동(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리영길 총참모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김춘삼 상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정철 보위사령관 등의 동행하에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15년에 즈음해 1월 1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다"고 보도함.
 - 통신은 "참가자들은 김정은 시대를 세계 위에 높이 떠올린 영광의 2014년을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돌이켜봤다"며 지난 한해 김정은의 잇따른 군부대 시찰로 '군력강화의 새로운 전성기'를 이뤘다고 평가함.

- 이어 "참가자들은 백두산 총대를 더 높이 추켜들고 뜻깊은 2015년을 민족사에 특기할 자랑스러운 한해로 빛내이는데 한 몸 다 바칠 불타는 맹세를 다짐했다"고 덧붙임.

■ 걸그룹 '모란봉악단'...북한 김정은 직접 작명(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새해를 맞아 '백두산대국의 승리와 영광의 상징으로 빛나는 고귀한 명칭들'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정권을 잡은 지난 3년간 직접 지은 명칭들을 소개하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의 인기 걸그룹 '모란봉악단', '햇불' 축구팀, '금수산태양궁전' 등을 듦.
- 신문은 이 외에도 건축학도 양성을 위한 '평양건축종합대학', 과학자들을 위한 편의·복지 시설인 '미래상점',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대표적 옷감 공장인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수산업 발전 강조 차원에서 직접 어촌에 하사한 최신식 어선 '단풍', 수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주택단지 '어촌단풍마을' 등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관심사이자 대표적인 '업적'으로 꼽히는 시설들에도 직접 이름을 붙였다고 전함.

■ 북한 김정은, 신년사 발표한 뒤 고아원 방문(1/2,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일 평양육아원·애육원을 찾으시고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셨다"라며,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한광상 당 재정경리부장, 리재일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함께 평양육아원과 애육원을 방문했다고 2일 보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 통신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함께 방문한 당과 군의 간부들에 대해 "잘했다"고 치하하고 "서로 돕고 이끌어주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회적 미풍"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으며, 원아들이 '설맞이 공연' 중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자 눈물을 흘렸으며 장내도 '눈물의 바다'를 이뤘다고 묘사함.
- 이와 관련 노동신문은 평양육아원·애육원을 방문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1~2면에 무려 17장이나 게재하며 고아를 돌보는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이미지를 한껏 부각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최영호 공군사령관 상장으로 승진(12/30, 노동신문;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노동신문이 30일 1면에 게재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조선인민군 제851군부대 관하 여성 방사포병 구분대들의 포사격 훈련 참관 관련 사진에서 이달 초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공군부대 시찰을 수행때만 해도 중장(별 들)이었던 최영호 공군사령관이 상장(별 셋) 계급장을 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최근 공군사령관 부임 직후 승진했음을 알 수 있다고 30일 보도함.
- 올해 北김정은 수행횟수 황병서 압도적 1위(12/30, 교도통신)
 - 교도통신은 일본의 해외 정보 청취·분석기관인 라디오프레스가 올초부터 지난 29일까지 북한 관영매체가 전한 김정은 黨 제1비서 동정 보도를 근거로 집계한 결과, 황병서의 수행 횟수가 130회로 가장 많았다고 30일 보도함.
 - 통신은 이어 김정은 黨 제1비서의 또 다른 측근인 최룡해 노동당 비서는 60회였고, '퍼스트레이디' 리설주가 15회,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13회로 각각 집계되었다고 전함.
 - 또 지난 29일까지 북한 매체에 보도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올해 동정은 173건으로 2013년의 230건에 비해 크게 줄었으며, 이는 다리 부상으로 9~10월에 걸쳐 약 40일간 공개활동을 중단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김정은 黨 제1비서의 공개 활동 중 군 관련이 절반 가까운 85건이었다고 통신은 덧붙임.
- 김영남, 최룡해 등 금수산태양궁전 참배(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최룡해 노동당 비서를 비롯한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과 당·정권기관·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 일꾼들이 1월 1일 '2015년 새해' 즈음 금수산태양궁전 참배했다고 2일 보도함.
-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 2인자 최룡해 아들과 결혼"(1/2, 연합뉴스; 노동신문)
 - 연합뉴스는 중국의 대북 소식통들을 인용하여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28)이 지난해 최룡해 당비서의 아들과 결혼한 것으로 안다"고 2일 보도함.

- 뉴스는 최룡해 비서는 슬하에 2남 1녀를 둔 것으로 알려지며, 장남은 30대 후반의 최준, 차남은 30대 초반의 최성으로 김여정과 결혼한 아들은 차남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보도함.
- 뉴스는 김여정 남편의 현재 직업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3월 김정은 黨 제1비서 부부와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할 당시에는 반지를 끼지 않고 있었지만, 노동신문이 2일 공개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을 수행한 김여정의 사진을 보면 왼손 네번째 손가락에 결혼반지를 끼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덧붙임.

다. 공식 행사

- 북한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 3년... "수령결사옹위"(12/29,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9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추대(12월30일) 3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정은 黨 제1비서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다고 보도함.
 - 중앙보고대회는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김기남·최태복·김평해·곽범기·오수용 당비서, 리영길 총참모장, 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조연준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당 책임비서, 서홍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참석했다고 매체는 전함.
 - 이어 리영길 총참모장이 경축 보고를 했으며, "수령결사옹위의 전통을 이어 경애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며 영도자를 중심으로 하는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야 한다"며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매체는 덧붙임.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백두의 칼바람정신' 강조… 김정은 총성 독려(12/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1일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온 뜻깊은 한해'라는 제목의 글에서 "원수님께서 심어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칼바람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 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고 강조하며, 김정은 黨 제1비서만을 믿고 받드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질 것을 주민들에게 촉구함.
 - 신문은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백두의 혁명적 신념으로 우리 인민은 강성국가 건설의 새봄을 맞이할 것"이라며 "혁명적 신념으로 수놓아진 올해를 통해 2015년이 더욱 휘황찬란하게 빛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역설함.
 - 신문은 특히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지난 10월 '백두혈통'을 상징하는 백두산 천지에 올라 "백두의 칼바람 정신은 죽어도 혁명신념을 버리지 말자는 것"이며 "혁명의 배신자, 변절자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예리한 바람"이라고 말한 사실을 소개함.

- '김정은 신년사' 관련 농업성 부상 리재현과 리희남·홍명철 국장들, 더 높은 알곡생산 성과로 위대한 승리의 해, 혁명적 대경사의 해로 빛내어 나갈 결의 표명(1.2, 중앙방송)
- 김정일 저작(사회주의 건설의 역사적 교훈과 우리 당의 총노선, '92.1.3) 발표 23주년을 맞아 저작은 '사회주의위업 완성의 참다운 진로를 밝혀준 기념비적 문헌'이라며 '우리(北)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의 선군혁명영도를 받들어 주체의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울 것'이라고 강조(1.3, 중앙통신·노동신문)
- 박봉주(내각 총리), 황해제철연합기업소 현지 요해(생산·개건실태 및 노동계급 격려) 및 김정숙평양방직공장·평양양말공장 방문(1.4,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북한, 포전담당제로 식량난 해결 발판 마련(12/2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9일 평양발 기사에서 북한이 올해 극심한 가뭄에도 농업 증산을 달성했다며 이는 "포전담당책임제와 같은 김정은 시대 농업시책이 온 나라 협동벌의 현실에 착실히 뿌리내려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증명자료"라고 강조하며, 김정은 정권의 대표적인 농업개혁 조치인 '포전담당제'의 정착으로 고질적인 식량난 해결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함.
 - 이어 신문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올해 2월 전국 농업부문 분조장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내년에 '더 높은 알곡고지 점령'을 목표로 내건 점을 들며 "조선의 농민들은 최고영도자의 호소에 화답해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해놓았다"고 덧붙임.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나진해운대학 "나선특구 우리가 이끈다"(12/8 교육신문; 1/4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4일 입수한 북한 주간지 교육신문 작년 12월 18일자는 나진해운대학의 현대화를 다룬 기획기사에서 "나진해운대학의 교육 조건과 환경이 최근 근본적으로 변모됐다"고 전함.
 - 실습실은 '선박조종모의기', '선박기관운전모의기', '해상조난통신모의기' 등을 갖춘 시뮬레이션 교육장으로, "학생들이 배에 오르지 않아도 현실에서 써먹을 수 있는 항해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함.
 - 정용택 나진해운대학 학장은 "앞으로 수십 대의 최신형 컴퓨터와 현대적인 실험실습 설비들을 더 구입해 모든 실험실과 강의실을 다기능화된 실험실과 강의실로 꾸릴 것"이라고 밝힘.

다. 경제 상황

- 북러 접경 중국 연변, 올해 관광객 15% 증가(12/31, 연변일보)
 - 연변일보는 연변주 관광국 통계를 인용해 올해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중국 연변(延邊) 조선족자치주를 찾은 국내외 관광객이 총 1천342만명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다고 전함.
 - 신문은 올해 관광 총수입은 216억위안(약 3조8천억원)으로 집계돼 작년 대비 25% 증가했으며, 이같은 지역 관광산업 호황의 주된 원인으로 항공편 확충을 비롯한 교통 여건 개선과 북한, 러시아 등 인접국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꼽음.

라. 대외 경제관계

- 북한-쿠바, 경제·과학기술 협력 의정서에 조인(12/29,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북한과 쿠바 정부 사이에 "2015년 경제 및 과학기술 협조·발전을 위한 회의 의정서와 2015년 상품교류에 관한 의정서가 29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보도함.
 -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 의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의정서에 리룡남 대외경제상과 헤르만 에르민 페라스 알바레스 북한 주재 쿠바 대사가 서명했다고 29일 보도함.
- "올해 전세계 대북지원 560억원...18%↓"(12/31, 미국의소리)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31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과 세계식량 계획(WFP)의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를 인용해 올해 대북 지원액이 5천 140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이는 작년의 6천300만 달러(약 691억 원)에 비해 18% 줄어든 것이라고 보도함.

- 북·중·러 지방정부, 두만강 하구서 새해맞이 공동행사(1/1, 중국신문사; 연합뉴스)
 - 중국신문사는 두만강 하구 일대에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와 러시아 연해주 하산구, 북한 나선특별시의 지방정부가 1월 1일 오전 6시부터 두만강과 동해가 만나는 3국 접경지역에서 일제히 폭죽을 터뜨리고 일출을 바라보는 신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1일 보도함.
 - 연합뉴스는 이들 3국 지방정부가 새해맞이 행사를 공동으로 연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이며, 중국 측 행사장소인 훈춘시 광촨(防川) 관광지에는 1천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모여 새해 소원을 빌고 민속공연을 관람했다고 1일 보도함.
 - 이어 뉴스는 지난해에는 중국인 관광객 50여명이 새해를 북한 나선시에서 맞이하는 이색관광코스가 운영됐지만 올해는 북한이 에볼라 차단을 위해 외국인 관광을 중단하면서 나선시 두만강동에서 자체적으로 불놀이, 일출 관람, 사진 촬영대회 등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또 뉴스는 이들 지방정부가 두만강 하구 지역을 육로와 바닷길로 연결하는 3국 관광코스를 개통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훈춘시 가오위린(高玉林) 당서기가 "북한, 러시아와 함께 새해맞이 행사를 하는 것은 훈춘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 협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훈춘은 앞으로 북·러와의 협력을 강화해 두만강 국제관광시범구를 공동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 농업과학원(모판종합영양제 개발 등) 및 건설·석탄공업(새 발파기 개발)·전력공업·수산부문(어황예보지원체계 프로그램 완성 과학자-기술자들의 "올해 인민경제 주요부문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도 선전(12.29, 중앙통신)
- 김일성종합대학(접촉식원자힘현미경 개발) 등(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의 식물성 살충제 개발, 김책공업종합대학의 평양기초식품공장 자동화 등) 평양시내 대학들의 "최근년간 가치있는 연구성과" 달성(12.29, 중앙통신)
- 황해남도 물길건설자들, 1월 1일 10만산 대발파를 진행(1.2, 중앙방송)

5. 사회

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북, '인터뷰' 막으려 국경 단속 강화...벌써 역효과 생겨(12/30, 데일리NK)
 - 데일리NK는 북한 소식통을 통해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반입을 막기 위해 밀수꾼들의 CD, USB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다고 30일 보도함.
 - 소식통은 북한 주민 대다수가 '인터뷰'라는 영화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는데 당국의 이번 단속 강화로 영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오히려 영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면서 '인터뷰'가 북한 주민 사이에서 확산될 조짐이라고 전함.
 - 이어 소식통은 "'최고 존엄'을 암살하는 내용인 만큼 처음 적발되면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당분간 한국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보는 것처럼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영화가 퍼지는 건 시간문제"라고 덧붙임.

마. 사회 동향

- 북한 인터넷망 일주일째 접속 불량…중국 서버 '먹통'(12/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오전 북한의 주요 매체 웹사이트를 접속한 결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김일성방송대학 웹사이트인 우리민족강당, 대외용 사이트 려명·류경·조선의오늘 등이 접속이 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의 주요 인터넷 사이트들이 '다운' 일주일째인 29일에도 접속 이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 뉴스는 먹통이 된 웹사이트는 모두 중국에 서버를 둔 것이며,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의 공식 도메인(.kp)을 사용하는 웹사이트와 조선신보, 민족통신 등 친북매체 웹사이트는 접속이 원활한 상태라고 전함.

- 북한, 내년 9월 외국인 대상 아마추어골프대회 개최(12/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북한이 매년 외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제5회 국제 아마추어골프대회를 내년 9월 6~7일에 할 예정이라고 대회 주관사인 영국의 루핀여행사 홈페이지(www.northkoreanopen.com)를 인용해 보도함.
 - 대회 주관사에 따르면, 대회는 연습경기와 스트로크 플레이로 치러지는 본선 경기 하루씩 모두 이틀 일정으로 진행되며 남한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이 참가할 수 있다고 뉴스는 전함.
 - 이어 골프대회를 포함한 이번 여행상품의 가격은 최소 1천 159달러(127만원)이고 대회 등록은 루핀여행사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매년 5월께 북한 평양에서 국제 아마추어 골프대회를 개최해왔으며 루핀여행사는 대회 진행을 주관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북한주민, 남한의 탈북자 도움으로 '인터뷰' 관람(12/29, 자유북한방송)
 - 자유북한방송은 29일 중국을 거쳐 남한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지닌 일부 북한 주민이 남한에 사는 탈북자의 정보를 토대로 김정은 黨 제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관람했다고 보도함.
 - 매체는 영화를 본 한 북한 주민이 "김정은을 그렇게 비하하고 어린이에 취급을 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지 않겠나, 그(김정은)에게 불만이 있다고 해도

'위대성 교육'만 받아온 우리(북한)사람들의 심리엔 '대중적인 모욕'처럼 생각될 것이다"고 전하며 "우리(북한)사람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은 영화, 오히려 반감을 일으키는 영화"라고 혹평 했다고 전함.

-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기자가 김 黨 제1비서에게 '왜 주민에게 식량을 주지 않느냐'고 묻는 장면이 가슴을 죄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라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함.

- 아시안컵 축구대회 북한 사령탑에 조동섭 감독(12/30, 로이터 통신)
 - 로이터 통신은 30일 "아시아축구연맹(AFC)으로부터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북한이 조동섭 감독을 사령탑으로 하는 엔트리를 제출했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보도함.
 - 통신은 "북한이 징계를 받은 윤 감독 대신 조 감독에게 아시안컵 지휘봉을 맡긴 것"이라고 해석하며 "북한 측에 감독 선임 배경을 문의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힘.
- 북한 인터넷망 '먹통' 8일만에 완전 정상화(12/30,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30일 오전 10시 북한의 주요 웹사이트를 접속한 결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김일성방송대학 웹사이트인 우리민족강당, 대외용 사이트 류경·조선의오늘 등 모두 접속이 원활했다며, 지난 23일 이후 줄곧 접속 불안 상태를 보였던 중국에 서버를 둔 북한의 주요 웹사이트들이 29일 오후부터 접속이 재개되어 현재까지 12시간 이상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30일 보도함.
 - 이어 북한 관영통신 조선중앙통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공식 도메인(.kp)을 사용하는 웹사이트들도 23일 새벽 1시 정지된 이후 같은 날 오전에 회복되고 나서 계속 정상 운영 중이라고 뉴스는 전함.
- 북한축구, 아시안컵 최종명단 발표...박광룡 발탁(12/3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아시아축구연맹(AFC) 홈페이지에 호주 아시안컵에 나설 북한 대표팀 최종명단이 발표되었으며, '인민루니' 정대세(수원 삼성) 대신 '북한산 스위스 폭격기' 박광룡(바젤)이 2015 호주 아시안컵에서 북한 축구대표팀의 최전방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고 31일 보도함.

- 북한, 대규모 불꽃놀이로 을미년 시작(1/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일 평양 대동강변 주체사상탑 일대에서 벌어진 대규모 불꽃놀이를 생중계하며, "지난해 공화국을 힘을 압살하려고 날뛰는 적들의 무분별한 대결 광증이 어느 때보다 극도에 달했다"며 축포를 '선군승리 만세의 환호성', '원수님께 올리는 감사의 꽃다발'이라고 치켜세움.

- 새해 맞은 북한...음식점·연하장 상점 '복적'(1/1,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TV)
 - 조선중앙통신은 1일 전국의 음식점과 기념품 매장에 새해 명절을 즐기려는 사람들로 복적거렸으며, 평양의 옥류관과 청류관 등을 찾는 주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고기쟁반국수, 신선로, 메기탕, 떡국을 즐겼으며, 함흥시의 신흥관, 사리원시의 경암각 등에서는 주민들이 지방 특산 음식을 즐기며 기쁨을 나눴다고 전함.
 - 이어 일부 주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길거리 야외 매대에서 파배기, 군밤, 솜사탕 등을 즐겼으며, 우편엽서·연하장 등을 파는 평양 축하장기념품 상점도 이날 주민들로 종일 붐볐다고 덧붙임.
 - 조선중앙TV는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평양 금수산태양궁전과 김일성 부자 동상이 있는 만수대 언덕에는 주민들의 참배의 발길이 이어졌으며, 룡라곱등어(돌고래)관을 찾은 청소년 학생들은 화려한 돌고래 쇼를 보며 새해를 맞았다고 1일 전함.

- 북한, IT 수업 확대...소학교도 '컴퓨터망' 교육(10/15, 인민교육; 1/4,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4일 입수한 북한 격월간 교육잡지 '인민교육' 2014년 5호(10월 15일 발행)는 '소학교 정보기술과목교재의 특성'이라는 글에서 "소학교 컴퓨터 과목이 정보기술 과목으로 개편되고 교수 내용과 형식도 새롭게 일신됐다"고 밝힘.
 - 이 잡지는 바뀐 부분으로 ▲교재에 정보기술 기초지식 포함 ▲교수 구조 새로 구성 ▲놀이수업 비중 확대를 꼽아 전체적으로 정보기술 교육 콘텐츠를 더하고 학생들의 능동적 참여를 끌어내는 교수법을 강화했다고 전함.
 - 인민교육은 "새로 만들어진 정보기술과목 교재에 정보와 정보기계, 컴퓨터망과 공유정보 등 초보적인 정보기술 지식과 관련한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됐다"면서 "이러한 변화는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정보산업 시대의 요구에 맞게 지식을 습득하고 능숙하도록 하기 위한 전제를 마련해준 것"이라고 평가함.

- 올해 '보건부문 성과(황해북도산원 등 건설, 옥류아동병원↔각지 소아병원들간 '원거리의료봉사체계' 수립, 에볼라 바이러스 방지사업 제약공업발전 등)와 사회주의 보건제도 우월성' 선전(12.29, 중앙통신)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병진노선·핵 억제력 강조 ... 6자회담 재개 불투명 (1/1, 연합뉴스)
 - 북한이 1일 신년사에서 이른바 병진 노선과 핵 억제력을 강조함에 따라 새해에도 북핵 6자회담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북한은 이날 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남북관계에는 일단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지만 핵 문제에 대한 태도는 전혀 바꾸지 않음.
 - 한·미 양국과 북한 간 이런 근본적 입장차로 2008년 말 중단된 북핵 6자회담은 아직 재개되지 않고 있음. 이번 신년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 변화가 관측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올해도 북핵 협상 재개 문제에 큰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정부 고위소식통은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변화가 없는 것 같다"면서 "북핵 협상 전망도 이전과 달라질 게 없는 것 같다"고 말함.

나. 미·북 관계

- 미 국무부 "북한의 도발 부인은 오랜 역사" (12/30,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이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을 부인하는 데 대해 "북한은 자신들의 파괴적이고 도발적인 행동을 부인해 온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말함.
 - 제프 래스키 국무부 공보과장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소니 해킹의 배후가 아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북한을 배후로 지목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결과를 신뢰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한편, 래스키 과장은 중국 내에서 구글의 이메일 서비스인 지메일 접속이 차단된 것과 관련, "12월26일 이후 중국 내에서 지메일 접속이 차단됐다는 보도를 접해서 잘 알고 있다"면서 "중국에서 인터넷을 포함해 표현의 자유가 약화되는데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함.

- 미국 의회, '소니 해킹 배후' 북한에 강경책 주문 (12/30, 연합뉴스)
 -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내년 회기 개원을 앞두고 소니 해킹의 배후로 지목된 북한에 대해 잇따라 강경책을 주문함.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30일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함.
 - 그는 "이번 공격을 '사이버 반달리즘(파괴행위)'보다 '사이버 테러'로 규정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소니사 해킹에 상응하는 고통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하원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 의원도 'CBS 로스앤젤레스' 방송에 나와 "북한의 자금줄을 끊어 핵 계획 뿐 아니라 해커들을 양성하는 북한 '121호총국'을 폐쇄하는 게 목적"이라며 다음 달 대북제재법안 발의를 할 것이라고 예고함.

- "'인터뷰' 제작사 협박에 북한 정찰총국 관여 정황" <교도통신> (1/1,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대한 이메일 협박에 북한 정찰총국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1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인터뷰'와 관련해 소니 픽처스 간부에게 발송된 이메일 가운데 일부는 정찰총국 산하의 해커가 중국 선양(瀋陽)의 IP 주소를 이용해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상황을 아는 외교 당국자가 밝힘.
 - 미국 측은 중국 정부에 해당 IP 주소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며, 사이버 공격 저지의 열쇠를 결국 중국이 쥐게 됐다고 통신은 덧붙임. 외교 당국자는 북한 인터넷 사이트가 최근에 접속 장애를 일으킨 것이 미국 정부의 공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커 집단이 벌인 일이라고 언급함.

- 미국, 무기수출 지원 의혹 북한기업 다시 제재 (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가 대량파괴무기(WMD)와 미사일 수출 지원 의혹을 받는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의 기관과 기업, 개인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함. 미국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자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외국기관 5개와 기업 16개, 개인 2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30일 관보를 통해 밝힘.
 - 북한 기업 중에서는 룡각산무역회사가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이 회사는 지난 1997년 미사일 수출활동을 지원한 의혹으로 2년간 포괄적 제재를 받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지난 2000년 제정된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은 다자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장비나 기술을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획득하거나 이전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제재를 부과하고 있음.

■ 미국, 김정은 '남북대화 제안'에 조야 경계심 드러내 (1/2,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강력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해 미국 조야는 일단 신중한 자세를 취함. 원칙론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지만, 김 제1위원장이 '대화의 환경과 분위기' 조성을 언급한 대목을 놓고는 '그 진의가 무엇일까' 경계심을 드러냄.
- 익명을 요구하는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근본적으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남북과 북미를 포함하는 전반적 대화국면에 돌파구가 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보임.
- 한 외교소식통은 "이번 신년사에서 북한은 핵과 경제의 동시 발전이라는 병진노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며 "비핵화 이슈에서 의미 있는 태도변화가 나오지 않는 한 근본적인 정세변화가 쉽지 않다"고 말함.

■ 미국 '북한 정찰총국' 제재 ... '소니해킹' 후속대응 첫 조치 (1/3,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소니 픽처스에 대한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 제재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함.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직접 겨냥한다고 명시하고 이번 사건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찰총국을 제재대상으로 공식 지정함.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힘.
- 이에 따라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그와 관련된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함. 그러나 제재대상으로 지목된 북한 정부와 노동당 간부들은 현재 미국과 거의 거래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실효적 의미보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미 당국자, 해킹배후 논란에 "전문가 접근 못하는 정보채널 있다" (1/4, 연합뉴스)
 -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최근 일부 사이버안보 전문가들이 소니 픽처스 해킹사건의 책임주체를 놓고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기밀 정보채널이 있다"고 밝힘.
 - 이 당국자는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을 상대로 한 콘퍼런스 콜(전화 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우리가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북한이 이번 해킹사건의 배후에 있다는 연방수사국(FBI)의 조사결과를 굳건히 지지한다"고 말함.
 -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해킹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별도의 비공개 정보를 확보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돼 주목됨.

다. 중·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일·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러·북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기타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미 국방부 "한·미·일 北정보공유 발효로 3국 안보 강화" (12/29,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28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간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공유(이하 정보공유)' 약정 체결과 관련, "정보공유 약정 체결로 3국의 안보가 강화되고 발전할 것"이라고 밝힘.
 - 국방부는 특히 "3국이 북한의 향후 도발이나 만일의 사태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함. 또 "미 국방부가 3국 간 정보공유의 중심(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번 정보공유 약정이 3국 간에 어떤 법적 의무를 새롭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함.
 - 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서명한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은 이날 공식 발효됐으며,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미국 "남북관계 개선 지지" 입장 재확인 (1/1, 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데 대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논평 요청을 받은 뒤 이 같은 내용의 짤막한 답변을 내놓음. 국무부는 김 제1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음.
 - 국무부의 이 같은 논평은 현재 우리 정부가 주도하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포괄적으로 지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북한이 내거는 대화의 조건이나 의도 등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평가를 삼가는 분위기임.

나. 한·중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다. 한·일 관계

- 일본 방위상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의미 있다" (12/29, 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9일 발효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이하 약정)'을 의미있는 조치로 평가함.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는 안보상의 공통적이고 시급한 과제이기에 이번 약정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이어 "이 약정은 미래지향적인 일·미·한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려는 일·한 방위 당국 의사의 상징"이라며 "일·한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내년 일·한, 일·미·한 관계에 더 많은 결실이 있도록 방위성으로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함.
 - 이번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 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임.

- 한·일, 관계개선 필요성에 공감 … 전망은 '불투명' (12/29, 연합뉴스)
 - 한·일 양국의 외교차관이 지난 24일 3기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지만, 구체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는 못함.
 - 일본 측의 요청으로 이례적으로 연말인 29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차관회의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차관은 한·일 국교정상화 50년이 되는 내년을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되는 해로 만들도록 노력하자는데 공감했으며 이런 차원에서 핵심 과거사 현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국장급 협의의 진전을 독려하자는 입장도 재확인 함. 그러나 한·일 관계 경색의 핵심 원인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은 없는 것으로 전해짐.

- 일본정부, 독도영유권 교육용 동영상 유포 (1/4,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또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함. 일본 정부기관인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일본인들이 과거 독도에서 어업 활동을 했다는 내용을 담은 그림책을 소개하는 형식의 17분짜리 동영상을 지난달 24일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에 올린 것으로 파악됨.
 - '메치(일본산 강치)가 있던 섬'이라는 제목의 그림책 저자인 전직 초등학교 교사 스기하라 유미코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책 내용을 설명하는 형식의 이 동영상은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활용토록 하기 위해 제작됐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4일 보도함.
 - 또 일본 외무성은 2013년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한국어를 포함, 10여개 언어 버전으로 제작해 유포했고 작년 1월 내각관방 영토·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홍보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미 상원의원 '소니 해킹 연루 의혹' 제기에 중국 반발 (12/29, 연합뉴스)
 - 미국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이 28일(현지시간) 김정은 암살을 주제로 한 영화 '인터뷰'의 제작사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해킹 배후와 관련해 중국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력하게 반발함.
 - 그레이엄 의원은 이날 CNN 방송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State of the Union)' 프로그램에 출연, 소니 해킹 사건을 거론하면서 "중국을 빼놓고는 북한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 중국이 연루됐거나 적어도 중국이 미리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그레이엄 의원의 발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중국은 어떤 외국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중국 경내 또는 중국 설비를 이용한 인터넷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측 인사의 이런 주장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안전 문제에 관한 상호신뢰와 협력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함.

바. 미·일 관계

- 아베, 미·일 정상회담으로 '中 역사공세' 견제 모색 (1/1,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의 올 상반기 미국 방문을 위한 준비를 신년 연휴(1~4일)가 끝나는 대로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지통신이 1일 보도함. 방미 시기는 미국과 일본이 협상에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시기와 연동돼 있으며, 양측은 4월 말부터 5월 초 사이의 일본 황금연휴 기간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양 정상은 일본이 전후 70년간 평화국가 행보를 견지해온 것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결정을 반영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등 동맹의 확대·강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라고 지지통신은 전함.
 - 종전 70주년인 올해 '역사카드'로 대일 비판을 강화할 중국 등을 견제하고, 미·일이 앞으로도 지역의 질서 구축을 주도할 것이라는 점을 국내외에 알리려는 목적이 내포돼 있다고 지지통신은 전함.
- "아베, 올 봄 미국 방문 때 패전 70주년 관련 연설" <아사히> (1/3,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올해 4월 말에서 5월 초에 걸쳐 미국을 방문할 때 종전 70년에 관한 연설을 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함. 아베 총리는 미국과 일본이 2차 대전 때 서로 싸웠지만, 전후에 긴밀한 관계를 쌓아왔다고 평가하는 내용을 연설에 담을 것으로 알려짐.
 - 한편, 아베 총리는 올해 4월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집단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안보 법제 정비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도 서두르고 있음.

- 이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작년 12월 17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로 회담하며 조기에 미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가이드라인 개정 등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염두에 두고 '어느 정도 전망이 섰을 때 오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아사히신문은 덧붙였다.

사. 미·러 관계

- 오바마 "전략적 인내, 푸틴과의 싸움에서 성과" (12/30,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취한 '전략적 인내'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싸움에서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함.
 - 29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공영 라디오방송 NPR 인터뷰에서 푸틴이 수개월 전 크림반도를 합병했을 때 일부 사람들로부터 '천재'라고 칭송을 받았지만 현재 러시아 경제가 곤경에 처한 상황에서 그는 그다지 멋져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함.
 -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붐 등으로 6월 이후 원유가격이 50% 이상 폭락함으로써 푸틴을 길들이려는 미국의 계획에 완벽히 부합했다고 지적함. 이어 "우리는 제재조치가 러시아 경제를 매우 취약하게 만들 것이며 올해가 아니면 내년, 후년에 불가피하게 원유가 하락사태가 오면 러시아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계산을 했다"고 설명함.
- 러 외무부, 미국 러시아인 추가 제재 강력 비난 (12/31, 연합뉴스)
 - 미국이 러시아의 인권침해 사례와 관련해 4명의 러시아인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리자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섬.
 - 알렉산드르 루카세비치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논평에서 "미국이 가는 해를 고조된 반(反)러시아 분위기로 마무리하려고 서두르면서 또 우리 국민에게 제재를 가했다"며 "누군가가 양국 관계의 근간을 심하게 흔들 어 놓고 싶어 못 견디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지적함.
 - 루카세비치는 이어 "미국의 행동이 이란 핵프로그램, 시리아 위기 등의 민감한 국제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양국의 협력 전망에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며 "우리는 이러한 비우호적 공세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함.

- 푸틴, 주요국 정상에 새해 축전 … 관계 개선 기대 밝혀 (12/31, 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방과의 심각한 갈등에도 주요 8개국(G8) 현직 및 전직 정상들과 다른 유럽국가 정상들에게 새해 축하 전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짐.
 - 크렘린궁 공보실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서 "새해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반(反)나치 연합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싸운 2차대전 전승 70주년을 기념하게 된다"며 "이 역사적인 날은 세계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두 나라의 책임감, 전 세계적 위협과 도전에 대한 싸움에서 두 나라의 특별한 역할을 상기시킨다"고 강조함. 푸틴은 그러면서 "러·미 간 파트너십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원칙에 기초할 때 성공적으로 발전해갈 수 있다"고 강조함.
 - 한편,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에선 러·한 양국 관계의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성격을 강조하고 "양국의 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평화 및 안정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함.

아. 중·일 관계

- 중·일, 중국군함의 센카쿠 근접놓고 또 설전 (12/30, 연합뉴스)
 - 중국 군함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에 근접한 것을 놓고 중일 양국이 또다시 거친 설전을 벌임.
 - 이번 사건은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에 가장 근접한 사례라며 "지금까지 없었던 기묘한 움직임"이라고 자위대 관계자가 밝힘. 일본은 중국 군함의 이같이 이례적인 접근을 시위·도발로 규정하고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보내 감시함.
 - 중국 외교부는 그러나 "우리 국방부가 이미 밝혔듯 서태평양에서 전개된 이번 훈련은 연례계획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유관국가(일본)는 공해상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라"고 촉구함.
- "일본·중국, '센카쿠 현상유지' 합의 시사 영국문서 공개" (12/31, 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이 과거에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를 '현상유지' 상태로 놓아두는 것에 합의했음을 시사하는 영국 공문서가 공개됨.

- 3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1982년 스키 젠코 당시(이하 동일) 일본 총리와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스키 총리가 이런 취지로 언급했다는 영국 공문서관 보관 문서가 비밀 해제에 따라 30일 공개됨.
- 센카쿠 열도의 영유권에 관해 당시의 일본 정부가 정식 외교 합의는 아니더라도 현상 유지를 암묵적으로 승인하고 문제를 뒤로 미뤄두는 전략을 용인하고 있었음. 현재 일본 정부는 센카쿠 열도와 관련해 뒤로 미뤄두거나 현상 유지하기로 중국과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암묵적 승인설을 부인하고 있음.

자.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차. 일·러 관계

- 러시아, 전승기념식에 아베 일본 총리 초청 (12/29, 연합뉴스)
 - 러시아가 내년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초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함. 러시아 측은 올해 여름 이후 아베 총리에게 초대장을 보내 행사 참석을 요청했다고 러·일 관계 소식통이 밝힘.
 -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회담했으며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 협상 등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다는 데 합의함.
 - 아베 총리의 참석 여부 판단에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일본에 대(對) 러시아 공조를 요구해 온 미국의 의향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일본·러시아, 지난달 고위급 군사회담" <교도통신> (1/2, 연합뉴스)
 - 일본과 러시아가 지난달 중순 군사당국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했다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함. 일본 항공자위대 북부방면대 사령관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동부 군관구를 방문, 러시아 공군 제3 항공·방공 부대 사령관 등과 회담함.

- 이들 협의는 일본 영공 및 영해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양국 항공기와 함선 사이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교도는 전함. 회의에서 양측은 불필요한 마찰을 막기 위한 방위교류를 계속하기로 함.
-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미국 중심의 대 러시아 제재에 형식적으로는 동참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실무적인 교류는 강화하는 양상임. 일본 정부는 작년 하려다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뤄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올해 안에 성사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짐.

© 국제전략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남한 국방백서 주적 표현은 '통일대박' 부정"(12/29,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북남관계 파국을 부채질하는 고의적 도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 정권과 군을 '적'으로 규정한 국방부의 '2014 국방백서'를 비난하며 남측이 내년에도 남북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 논평은 남측이 북한의 위협과 도발을 주적 표현의 근거로 내세웠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장본인은 남측이라며 한미 합동군사훈련, 대북전단 살포, 북한인권문제 압박 등을 그 사례로 꼽았다.

- 북한, 대화 제의에 반응 없이 통준위 비난 공세(12/30, 연합뉴스)
 - 북한 노동신문은 30일 '체제통일의 개꿈에 사로잡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의 남북 당국간 회담 제의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정부가 대화 채널로 내세운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 신문은 통준위가 준비 중인 통일현장에 대해서도 "북침 야망을 실현하려는 위험한 전쟁문서"로 규정하고 "괴뢰반역패당의 반통일 범죄행위를 역사와 민족은 철저히 결산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대결 흥심을 드러낸 북인권법 조작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도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 제정 움직임을 비난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치마두른 독재광"이라는 원색적인 표현으로 매도했다.

- "북한 주민, 남한의 탈북자 도움으로 '인터뷰' 관람"(12/30, 연합뉴스)
 - 도쿄신문은 일부 북한 주민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미국 코미디 영화 '인터뷰'를 관람했다고 30일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중국을 거쳐 남한의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지닌 북한 주민은 남한에 사는 탈북자의 정보를 토대로 인터넷에서 인터뷰를 관람했다고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가 밝혔다.
 - 도쿄신문은 제작사 소니픽처스가 인터넷에서 영화를 공개하고서 약 이틀 만에 인터뷰가 북한에 유입됐다고 전했다.

- 영화를 본 한 북한 주민이 "김 제1위원장을 깎아내리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다. 위대하다고 교육받아온 우리는 모욕으로 받아들였다"는 반응을 보인 한편, "외국인 기자가 김 제1위원장에게 '왜 주민에게 식량을 주지 않느냐'고 묻는 장면이 가슴을 죄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함.
 - 자유북한방송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는 25일 긴급회의를 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에 인터뷰가 유입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임.
 - 신의주의 한 소식통은 "최신 인기 한국 드라마가 DVD 1장에 5천500원이지만 일부 주민은 인터뷰에 10배인 5만 5천 원도 내겠다고 약속할 정도로 영화가 호기심을 보이고 있다"고 이 방송에 밝혔음.
- "말레이시아, 북 근로자 강제노역 조사"(12/30, 자유아시아방송)
- 일본의 인권단체 아시아인권의 가토 켄 대표는 30일 말레이시아 외무부의 공보담당 국장 및 의회 의원들이 북한에서 파견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 등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 또한 지난 17일과 18일 양일 간 말레이시아 외무부 관리와 의원들에게 말레이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인권유린과 북한 정권에 대량의 현금이 유입되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힘.
 - 가토 대표는 지난달 22일 말레이시아 탄광 폭발 사고에서 북한 광부 한 명이 사망하면서 알려진 북한 광부 46명의 열악한 근로 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집권 여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와 북한 노동당이 지난달 26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점에 주목하고 이 같은 편지를 보냈다고 덧붙였다.
 - 그는 말레이시아의 한 야당 의원(GOOI HSIAO LEUNG MP)이 현지 신문에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비난하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가토 대표는 이 서한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 지적한 북한의 해외파견 노동자들의 강제노역 등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북한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에 말레이시아 정부와 의원들이 주목해 줄 것을 촉구했음.
 -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은 심각한 인권 유린의 문제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접점에 있다고 지적하며 국제노동기구의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등의

- 비준국인 말레이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을 간과하지 말 것을 강조함.
- 특히 내년 1월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사국으로 활동할 예정인 말레이시아의 북한 인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함.

■ "불법통화 단속으로 무산郡서만 30여명 체포돼"(12/31, 데일리NK)

- 북한이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외부(한국·중국)와 통화한 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함경북도 무산에서만 30여명 정도가 체포됐다고 내부 소식통이 알려왔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31일 외부와의 통화 자체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며, 검열 초기인 9월 초에는 '외부와 통화를 미리 자수하면 용서한다'는 내용으로 강연도 있었지만 자수한 주민이 단련대로 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더 긴장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도(道) 보위부는 외부와 통화하다가 발각된 주민들에게 1만 위안(元, 북한 돈 약 1,300만 원) 벌금을 물리고 있으며, 송금 브로커를 하다가 적발 시에는 교화소 1년형을 받고 있음.
- 상황이 이렇다보니 송금 브로커들은 송금액의 30%가 아닌 5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마저도 단속이 엄격해 나서려는 브로커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양강도 소식통도 보위부가 장악하고 있던 밀수꾼이나 전화 사용자들이 무리로 체포되는 등의 사실을 확인해 주었음.
- 소식통에 따르면 체포된 주민들 중 돈이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병보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매일 방문하는 보위원들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수감실에서 구타를 당하며 취조를 받는 것보다 나아 일부 주민들은 돈을 빌려서라도 병보석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北김정은, 원아들 "원수님, 고맙습니다"에 '눈물'(1/2, 데일리NK)

- 북한 노동신문은 2일 김정은이 새해 첫날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함께 고아원인 평양육아원·애육원을 방문, 새해를 맞는 어린이들을 축복해주었다고 보도했음.
- 김정은은 신년사 육성 발표 첫머리에서도 "귀여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더 밝은 미래가 있기를 축복한다"며 '어린이 사랑, 후대사랑'을 강조한 바 있으며,

- 신년사를 마친 후 평양육아원·애육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신문은 이날 김정은이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육아원·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 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며 식당, 보육실, 교양실, 장방, 물놀이장, 지능놀이실 등 여러 곳을 돌아봤다고 전했다.
 - 김정은은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모든 시설들에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융축되어 있다"면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는데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독려했음.
 - 신문은 원아들이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자 장내가 눈물바다를 이뤘고, 김정은도 눈물을 흘렸다고 소개했음.

2. 북한 인권

- 반탁승리기념대회 개최...“北인권운동 총력”(12/29, 연합뉴스)
 - 한국반탁반공학생운동기념사업회는 29일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대강당에서 제69회 반탁승리 기념대회 개최함.
 - 이철승 기념사업회 총재는 기념사에서 "굶주림과 억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인권 운동은 최고의 통일운동"이라며 "이 운동을 전 국민적 차원에서 총력전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음.
- 해 넘긴 쟁점 법안...새해도 '입법전쟁' 예고(12/30, 연합뉴스)
 - 국회가 29일 150개에 가까운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지만 '북한인권법'은 벌써 수년째 처리가 미뤄지고 있으며, 여야간 쯤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새해까지로 이어지는 보름 남짓 남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를 장담할 수 없음.

- 정부 "5·24조치 北요구 들을 것...핵·인권 별도협약"(12/30,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통일준비위원회가 제안한 남북회담과 관련하여 "5·24조치 해제 같은 것은 통준위 차원에서의 남북협약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남북 책임 있는 당국자가 만나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함.
 - 그는 "다만, 그 문제를 풀기 위한 실질적 협의를 위해선 당국간 후속 협의나 대화 등을 통해 협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또 "(북핵과 인권 등) 의제에 있어서는 적절한 채널, 별도 대화의 장을 통해서 협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날 제의한 회담의 취지는 쉽게 합의하여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남북 간 협의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 보았음.

- 북한 대규모난민 발생시 전면수용 48%-선별수용 39%(12/31, 뉴시스)
 - 북한인권정보센터와 엔케이소셜리서치가 지난 12~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만약 북한 난민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적절한 대응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은 결과 응답자의 48.2%는 "북한이탈주민은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음.
 - 반면 38.9%는 "경제적 능력과 외교적 부담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8.7%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다. 모름·무응답은 4.2%였음.
 - '북한인권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문항에는 응답자의 53.0%가 유엔 등 국제단체 활동이라고 응답했으며, 남북한 북한인권 대화(17.4%), 대북제재(9.3%), 대북지원(7.3%), 민간 북한인권단체 활동(7.2%), 모름·무응답은 5.9%였음.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서 다음 중 누가 가장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란 문항에는 응답자의 27.1%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집단으로 북한정부를 지목했고, 유엔(20.3%), 우리 정부(20.0%), 국제인권단체(15.1%), 미국 등 각국 정부(8.3%), 국내 북한인권 단체(3.8%) 순이었으며 모름·무응답은 5.3%임.

- 이번 조사의 표집틀은 유무선 전화 RDD고 표집방법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기준 비례할당추출이었고, 조사방법은 전화면접조사였음.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 응답률은 9.8%, 총 통화 1만242명 중 1,000명이 응답을 완료했음.
- **차대통령 "남북대화 재개 위해 반총장 지원 기대"(1/2,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2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의 신년 전화통화에서 "남북대화 재개와 앞으로 북핵문제 해결을 통한 남북관계의 근본적 개선, 인권문제, 북한주민의 삶을 위한 지원확대를 유엔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음.
 - **북한인권법 與野협의체 추진(1/2, 매일경제)**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남북정상회담을 전격 제안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북한인권법 처리를 위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음.
 - 유기준 외교통일위원장은 매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6일 통일부 소관 법안심사소위에서 북한인권법을 다룰 예정"이라며 "미쟁점 조항은 외통위 차원에서 정리하고, 쟁점 사항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서 큰 틀에서 논의하는 방안을 지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음.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당 간에 협의만 하면 될 것 같다"며 "다만 북한인권법은 인권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탈북자

- **미 탈북자들 '인터뷰'에 큰 공감(12/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가 미국 극장에서 개봉된 지 1주일도 안 돼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영국 로이터 통신은 이 영화는 지난 25일 개봉한 이래로 불과 4일 만에 극장 상영으로 28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온라인 판매 실적 1,500만 달러로 소니 영화사가 제작한 영화 중 해당기간 역대 최고 수입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음.

- '재미탈북민연대(NKinUSA)'의 조진혜 대표는 미국 정착 탈북자 모임에서 함께 시청하며 영화에 크게 공감했다고 전했으며,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 박지현 유럽연합-북한인권 간사는 영화의 한국어 자막이 북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번역되어 북한에 전해지길 희망했음.
-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영화가 서방세계를 아는 북한 상류층이 공감하기 쉬울 것이나, 북한 주민이 신처럼 떠받드는 김정은 제1비서를 서방세계가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한국의 대북방송매체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한국에 정착한 가족을 통해 이 영화가 북한 주민에게도 급속히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음.

4. 이산가족

- 남북 당국회담 1월중 개최 제안...“상호관심사 협의”(12/29,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에서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 차원에서 내년 1월 중 남북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당국 간 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함.
 - 류 장관은 "이 만남을 통해 설 전에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도 언급했음.
- 이산가족 "생사확인부터 우선돼야"(12/30, 자유아시아방송)
 - 남측이 29일 남북대화를 촉구하면서 설 전에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희망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산가족 단체들은는 상봉보다는 전면적 생사 확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음.
 - 실제로 통일부가 2011년 남측 이산가족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북측의 가족과 교류방법으로 생사 확인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40.4%로 가장 많았으나, 현재 생사를 아는 가족은 8%에 불과함.
 - 이 때문에 남측의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는 "남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전체 명단을 주고받아 생사 확인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정부 "가까운 시일내 형식구애없이 당국대화 기대"(1/1,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1일 북한의 신년사 발표와 관련한 브리핑에서 북한에 조속한 당국 간 대화 개최와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음.
 - 류 장관은 "정부는 분단 70년의 최대 비극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오늘 북한이 제기한 최고위급 회의를 포함해 남북간 모든 관심 사항에 대해 실질적이고 허심탄회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함.

- '23년내 이산가족 전면 생사확인.서신왕래' 적극추진(1/2, 연합뉴스)
 - 정부 고위당국자는 2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 당국간 대화가 성사되면 이산가족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논의할 계획임을 밝혔음.
 - 특히 올해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전원의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서신왕래, 수시 상봉행사 개최 등 이산가족 문제의 상당부분 해결 방안을 북측에 제안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며 "생사확인과 서신 교환까지는 적어도 2~3년 내에는 잘만 하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 정도만 돼도 이산가족의 한을 상당히 덜어 드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음.
 - 정부는 대부분 고령인 이산가족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일회성 상봉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면적인 생사확인을 통해 북한에 가족이 살아있는 이산가족들을 가리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신왕래 및 수시 상봉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북측이 원하는 부분은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임.
 - 일각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대가로 쌀과 비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쌀과 비료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음.

5. 남북자

- 특이동향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CFK, 내년 북 간염-결핵 치료 중점(12/29, 자유아시아방송)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CFK: Christian Friends of Korea) 2015년 대북 사업은 B형 간염 치료와 예방 사업, 그리고 평양에 세운 결핵 연수 센터에서의 보건 인력 양성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이 기구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간염 치료와 예방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간염 치료를 위해 환자들에게 음식, 의약품, 식수 등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해 11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음.
 - 또한 내년에 36만여 달러를 결핵 연수센터에 투입하도록 예산을 세워 북한 보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강의와 실습을 병행해 결핵 치료의 효능과 부작용, 그리고 환자 관리에 대한 연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이 기구는 올해 5월 평양의 중앙 결핵 예방 병원 부지에 연수 훈련 센터를 완공하고,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등에서 치료가 어려운 다제내성 결핵 치료와 관련한 전문가들을 북한에 파견해 보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한 바 있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은 이 밖에도 북한의 보건 시설들을 개보수해주는 사업에 미화로 22만여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음.
- 스위스, 대북지원사업 동영상 공개(12/30, 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SDC)은 지난 27일 공개한 내년도 북한에서 식량과 식수 지원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국정홍보 웹사이트에 소개한 대북사업 동영상을 통해 밝혔음.
 - 스위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 사업 대상은 크게 땅과 물로 나뉘며, 산간농법을 전수해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수도시설을 개선해 주민이 마시거나 일상생활에 사용할 물을 더 확보하도록 돕고 있음.

- 2014 국제사회 대북 지원, 대부분 식량(12/20, 미국의 소리)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와 세계식량계획(WFP)이 공여국, 국제기구, 민간 구호단체들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해 발간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 해 유엔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은 30일 현재 약 5천1백만(51,468,288) 달러로 전년도인 2013년의 6천3백만(63,058,999) 달러보다 18% 감소했음.
 - 2014년 전체 대북 지원의 69%에 달하는 3천6백만 달러(35,659,680)는 식량 등 영양 지원에 집중되었으며, 지원은 주로 WFP와 식량농업기구(FAO)를 통해 이뤄졌음.
 - 세계식량계획 웹사이트에 따르면 2014년에 이 기구를 통해 북한에 영양 지원을 제공한 나라는 한국과 스위스, 러시아, 중국 등 총 10개 국으로, 기부금액은 총 3천3백만 달러에 이룸.
 - 유엔도 중앙긴급구호기금(CERF)를 통해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에 각각 3백25만 달러와 1백만 달러를 지원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건과 영양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음.

- 정부, UNESCAP 대북기술지원 사업에 62만달러 지원(12/31, 연합뉴스)
 - 통일부는 31일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의 제2차 대북기술지원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62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힘.
 - 이번 결정은 30일 서면 개최한 제26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의결되었음.
 - UNESCAP은 내년 상반기 중에 경제 등 분야에 대해 대북기술지원 사업을 실행에 옮길 예정으로 알려졌다.

- 캐나다, 지난해 대북지원 400만 달러(1/2, 자유아시아방송)
 -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유엔 기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식량과 의료 분야에 약 4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비슷한 규모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음.
 - 캐나다 외교부의 케이틀린 워크맨 대변인은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300만 달러, 국제아동기금(UNICEF)에 100만 달러 씩 전달했다고 설명으며, 이는 캐나다가 2013년 세계식량계획에 미화 약100만 달러를 기부한 것보다 300% 증가한 것임.

- 워크맨 대변인은 지난 2013년 유엔의 북한 작황조사에 전문가단을 파견해 세계식량계획을 통한 식량의 분배와 감시 상황을 점검하는 등 지원 후 분배 감시에 적극 참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캐나다 정부의 2015년 대북지원 규모와 관련해 워크맨 대변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북한에서 식량 구호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들과 협의를 진행한 뒤 지원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 워크맨 대변인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캐나다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지원을 중단했으며 이후 유엔 기구를 통한 인도주의 지원만 진행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를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청와대, 대북 분유 4,000천톤 제공설 사실무근 반박(1/3, 미디어펜)
 - 청와대는 3일 북한에 분유 4천톤(400억 원어치)을 보내기로 했다는 모 보도와 관련, "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부인했다.
 - 청와대는 일부 낙농가에서 이같은 건의를 했지만, 현재론 어떤 결정이나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 분유 지원설은 종편 MBN이 지난 2일 단독 취재라며 우리 정부가 대북 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 식량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으며, 해당 방송사는 민간단체나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영양실조에 시달리는 북한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청와대는 물론 통일부 관계자 역시 "낙농가의 어려움은 정부가 잘 알고 있지만, 대북지원 문제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 연천군 "봄이 오면 대북 지원 묘목 심는다"(1/4, 연합뉴스)
 - 경기도 연천군이 북한 산림녹화 지원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양묘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군은 북한 산림 황폐화로 접경지역에 예상되는 자연재해를 조기에 막고 비무장지대(DMZ)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음.
 - 또한 북한에서 긴급 지원 요청이 있을 때 안정적으로 묘목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음.

- 군은 올해 3만 그루의 묘목을 키운 뒤 내년에는 북한 지역에 맞는 수종 등을 추가하고 수를 늘릴 계획이며, 노지 양묘재배와 함께 짧은 기간에 균일한 수목을 대량생산하고 활착과 생육상황이 좋도록 비닐온실에서도 묘목을 키우기로 했음.
- 군은 오는 2020년까지 군(郡) 남북협력기금 50억 원을 적립해 이 사업에 활용할 계획임.

8. 북한동향

- '北 인권' 유엔안보리 정식안건 채택 관련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해 '정윤희 국정개입과 「통진당」 해산 등 반인민적 악정으로 초래된 심각한 통치위기를 모면해 보려는 것'이라며 '인권전쟁을 선포한 괴뢰패당을 단호히 징벌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위협(12.28, 중앙통신·민주조선)
- 올해 '보건부문 성과(황해북도산원 등 건설, 옥류아동병원↔각지 소아병원들간 '원거리의료봉사체계' 수립, 에볼라 바이러스 방지사업 제약공업발전 등)와 사회주의 보건제도 우월성' 선전(12.29, 중앙통신)
- "미국은 원천적인 테러국가, 국제테러 왕초"라며 미국 국가의 대동과정 및 이라크·아프가니스탄 등 반테러전 주민살상과 최근 CIA 고문자행 등 거론하며 "미국을 지구상에서 송두리째 들어내야 한다"고 주장(12.29, 중앙통신 논평/테러를 자부하는 말세풍조)
-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 1일 평양육아원·애육원 방문 및 새해 원아들 축복(1.2, 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은 평양육아원, 애육원의 모든 시설물들에는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응축되어 있다고 하면서 육아원과 애육원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당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이 원아들에게 그대로 가닿도록 하는데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